

제282회대구광역시의회의회(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년 4월 2일
- 발 의 자 : 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진련·임태상·  
송영헌·전경원·홍인표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2. 주요내용

- 여론조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와 제외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여론조사의 시행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토록 명시함(안 제8조).
- 여론조사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누설을 제한함(안 제9조).

### 3. 검토의견

#### ○ 이 제정 조례안은

- ▶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 ▶ ‘여론(輿論, public opinion)’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중엽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학자 장자크 루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여론’을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으로, ‘여론조사’는 ‘개별적인 면접이나 질문서 따위를 통하여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 오늘날에 이르러, 복잡다난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여론은 이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산출하여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 여론을 배제한 정책의 성공은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사회의 현안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여론정치라고도 규정하고 있음.

- ▶ 여론조사와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하며, 그 외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론조사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그 외의 여론수렴 방안으로, 서울특별시(2013년)와 경기도(2015년)는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9년 말부터 제안·토론·투표·설문 등의 통합 플랫폼인 '토크 대구'를 운영 중에 있음.

○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조에서는 여론조사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음.

- ▶ **안 제4조**에서는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대구시와 산하 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전적 수요조사를 규정하여, 타 광역단체의 여론조사 조례와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 ▶ **안 제5조**에서는 법률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과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여론조사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에서는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열거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여 제한하였으며,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 ▶ **안 제8조**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표본 선정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두었음.

- ▶ 안 제9조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의 부당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대구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결정의 길잡이를 제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에게는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추진결과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지방행정 발전의 양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올바른 여론 형성의 전제는 정확한 사실의 제공에 있으므로, 대구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 타 지자체 여론조사 조례 운용 현황

구 분	조 례 명	소관부서
광역시자치단체 (1건)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2018.02.07.)	시민행복소통본부 소통기획담당관
기초자치단체 (청주시 등 11건)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 (2015.11.13. 최초)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 (2016.07.15.)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2016.09.23.)	기획실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 (2016.12.23.)	기획전략실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2017.01.01.)	기획감사실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 (2017.03.28.)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 (2017.05.01.)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곡성군 여론조사 조례 (2017.10.11.)	기획실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 (2019.09.27.)	기획감사실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 (2020.10.30.)	기획감사실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 (2020.12.10.)	정책기획관

※ 대구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 - 소통민원과